

KMI 동향분석

VOL.71
2018 FEBRUARY

발간년월 2018년 2월(통권 제71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감 수 하동우 인포그래픽 김태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정책동향연구본부 동향분석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 대상 홍보 강화해야

현대송 독도연구센터장
(hyun@kmi.re.kr/051-797-4785)
최지현 독도연구센터 전문연구원
(21cjoshua@kmi.re.kr/051-797-4793)
김원희 독도연구센터 전문연구원
(whkim14@kmi.re.kr/051-797-4792)
백인기 독도연구센터 전문연구원
(ikpaik@kmi.re.kr/051-797-4792)
김주형 독도연구센터 전문연구원
(jhkim7664@kmi.re.kr/051-797-4792)
김 민 독도연구센터 연구원
(km0517@kmi.re.kr/051-797-4798)
정유민 독도연구센터 연구원
(yloveh6@kmi.re.kr/051-797-4798)

일본 정부는 1월 25일 도쿄 중심에 있는 히비야공원 시청회관(市政会館) 지하 1층에 약 100평방미터 크기의 ‘영토·주권전시관’을 개관하였다. ‘영토·주권전시관’에서 상설 전시하고 있는 사료는 일본 정부의 영토주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년),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1696년),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1870년), 「태정관 지령 문서」(1877년) 등 일본에 불리한 사료는 일절 전시되어 있지 않다.

현재 일본은 독도 분쟁화 로드맵에 따라 국내외 홍보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총리실 직속의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이와 같은 적극적인 영토주권 홍보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자국민과 초등학생 등 어린 세대들을 대상으로 독도 관련 홍보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번 영토·주권 전시관 개관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자 넓게는 ‘독도 분쟁화 전략’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대중 기반 홍보 방식에 대응하여 우리는 새로운 유형의 홍보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전략은 대내외적으로 독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화하여

‘독도의 분쟁화 전략’에 일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독도에 관한 홍보를 대중 홍보에서 전문가 대상 홍보로 홍보 타겟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 대상 홍보의 출발은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이다. 전문가 대상 홍보의 가장 큰 장애물은 언어이며 중요 사료들이 한자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 여론 주도층이 독도에 대한 역사적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태정관 지령 문서」(1877년) 등 일본 사료 중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진행해서 보급, 홍보해야 할 것이다. 해당 작업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 세계 학자들과 공동으로 이를 번역하는 작업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중요 사료의 영문 번역 자료를 번역 및 해제한 전문 학술서적을 출판하는 동시에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출판기념회 및 도서 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성과를 확산시키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상설 전시관 개관

■ '영토·주권전시관'을 개관하고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임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사료를 상설 전시

- 일본 정부는 1월 25일 도쿄 중심에 있는 히비야공원 시청회관(市政会館) 지하 1층에 약 100㎡ 크기의 전시관을 설립함
- 영토·주권전시관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 1905년 각의결정 문서를 비롯하여 메이지 시대 일본인이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개발 시 찍은 사진에 나타난 물건의 복제품 등 약 60점의 사료를 전시 중임
- 전시된 사료는 일본 정부의 영토주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일본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년),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1696년),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1870년), 「태정관 지령 문서」(1877년) 등의 사료는 일절 전시되어 있지 않음

그림 1. 영토·주권 전시관에서 배부하고 있는 독도 관련 외무성 홍보자료 및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자료조사보고서



자료 : 직접 촬영

-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는 남쿠릴 4도(일본명 북방영토) 관련 자료는 이미 홋카이도(北海道)에 전시 시설이 있으므로 이 전시관에는 전시하지 않고 자료만 배부하고 있음

그림 2. 영토·주권 전시관에서 배부하고 있는 센카쿠 제도와 남쿠릴 4도 관련 외무성 홍보자료 및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자료조사보고서



자료 : 직접 촬영

■ 우리 정부는 25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폐쇄조치를 엄중히 요구

- 외교부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일본 정부가 영토주권전시관을 설치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인 폐쇄 조치를 엄중히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함
- 우리 정부가 전시관 개설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전시관의 즉각 폐쇄를 요구한 것에 대해 에자키 테츠마(江崎鉄磨) 영토문제 담당대신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변함

영토·주권 전시관 개설은 일본의 '독도 분쟁화 전략'에 따른 홍보 강화 정책의 일환

■ 일본은 독도 분쟁화 로드맵에 따라 국내외 홍보정책을 본격 추진

- 2012년 12월 출범한 제2차 아베 내각은 최초로 해양정책·영토문제 담당 내각부 특명대신을 설치하고, 2013년 2월 5일 수상을 보좌하는 내각관방에 영토 문제를 전담하는 15인 규모의 '영토·주권 대책기획조정실(이하 영토실)'을 신설함
- 영토실은 외무성 및 내각부 북방영토대책본부와 함께 일본의 영토 정책을 주도하고 있음
- 영토실은 자문기관인 '영토·주권을 둘러싼 내외 발신에 관한 유식자(有識者) 간담회(이하, 유식자 간담회)'를 신설하고 유식자 간담회가 제시하는 영토주권 홍보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함
- 제2기 유식자 간담회는 2015년 6월 11일 「영토 주권을 둘러싼 내외 발신에 관한 유식자 간담회 제언(領土・主權をめぐり内外発信に関する有識者懇談会提言)」을 영토실에 제출함

■ 영토실은 유식자 간담회의 정책제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적극적인 영토주권 홍보정책을 수립

- 유식자 간담회는 일본의 영토주권 문제의 대외 홍보를 위해 국제법을 중시하는 일관성 있는 태도, 영토주권 관련 상대국의 주장에 대한 신속대응, 홍보대상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부응하는 세심한 홍보 실시,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기 위해 미국, 아시아, 유럽 등 각 지역에 홍보 실시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함
- 또한 정부에 의한 대외홍보 강화와 함께 해외부임자, 유학생 등 정부 이외의 주체가 보다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하였음
- 일본의 영토 주권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계발사업 실시, 대외홍보에 뛰어난 인재 육성, 국내외 일본 영토·주권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 대한 신속한 지식정보 제공, 국민 여론 조성을 위한 국민 각층의 의식과 관심의 고취, 전문가 세미나 및 홈페이지 운영, 교육을 통한 계발 강화 등 구체적인 홍보정책을 제시함
-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보전하고 활용하는 체제를 신속히 정비하고 관련 자료를 해외 관심층 등이 접하고 아용할 수 있도록 1차 자료의 외국어 번역 실시, 영토·주권 문제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문헌자료에 관해 학술적으로 조사연구수집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을 강조함
- 영토·주권 관련 홍보의 선두에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 시마네현을 비롯하여 각 지역에서 실시되는

영토·주권문제와 관련한 체계를 지역의 협력을 얻어 전파하도록 제언함

■ 대내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기조에 따라서 일본 정부는 자국민과 어린 세대들을 대상으로 독도 관련 홍보활동을 충실이 이행하고 있음

- 시마네현은 2016년 2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앞두고 마쓰에시의 시마네현청에 있는 '다케시마 자료실'에서 2016년부터 사용될 중학생용 사회과 교과서 특별전시회를 개최함
-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은 2016년 7월 27일~28일 중앙합동청사에서 개최된 '어린이 가스미가세 키(중앙합동청사) 견학일' 행사에 전시 부스를 설치하고, 독도, 센카쿠 제도/다오위 다오 관련 내용의 전시회를 개최함
- 무타이 슌스케(務台俊介) 내각부 대신정무관은 2012년부터 5년 연속으로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전에 참석함
- 오키 제도의 4개 기초자치단체는 2017년 7월 3일 시마네현 독도자료실의 수집 자료나 활동성과 등을 시마네현 내의 각지에 소개하는 이동 판넬전 '출장 독도 자료실'을 개관함
- 영토실은 2017년 5월 12일 독도 관련 자료 340점을 조사하여 12점을 공개하였고, 같은 해 9월 29일 영토주권에 관한 교육자료집을 발간하였으며, 10월 27일 독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함

*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독도에 관한 여론조사는 2013년 6월, 2014년 11월 2차례 실시된 바 있음

표 1. 최근 3년간 일본의 독도 관련 국내 홍보활동

일자	내용
2015. 2. 22.	마츠모토 내각부 대신정무관, 제10회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 참석
2015. 4. 7.	영토실, 웹 사이트 리뉴얼, 독도와 센카쿠 제도에 관한 자료 위탁 조사 보고서 및 영토 주권에 관한 포스터 공개. 일본의 영토·주권에 관한 일본의 논문 영어 번역 버전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웹 사이트에 게재
2015. 6. 12.	'영토·주권을 둘러싼 내외 발신에 관한 유식자 간담회' 제안 제출
2015. 6. 12.	영토실, 웹 사이트에 한국어 및 중국어 버전 추가
2015. 8. 28.	영토실, 독도와 센카쿠 제도 포털 사이트 개설, 자료 202점 게재
2016. 2. 22.	사카이 내각부 대신정무관, 제11회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 참석
2016. 3. 10.	영토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독도와 센카쿠 제도 '키즈 사이트' 공개
2016. 4. 15.	영토실, 영문판 독도와 센카쿠 제도 자료 포털 사이트 공개
2016. 9. 23.	영토실, 독도와 센카쿠 제도 자료 포털 사이트에 자료 207점 추가 게재
2017. 2. 22.	무타이 내각부 대신정무관, 제12회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 참석
2017. 3. 31.	문부과학성,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가르치도록 명기한 초등학교 용 '신 학습지도요령' 공시
2017. 5. 12.	영토실, 독도 관련 자료 340점을 조사하여 12점 공개
2017. 7. 3.	시마네현 오키 제도의 '출장 다케시마 자료실' 개회식에 이치카와 마사키(市川正樹) 영토·주권 대책 기획조정실장이 참가
2017. 9. 29.	영토실, 영토·주권에 관한 교육자료집을 홈페이지에 공개
2017. 10. 27.	내각부가 7월 중에 실시한 독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개
2018. 1. 25.	영토실, 도쿄 히비야공원 내 시정회관에 영토·주권 전시관을 개관. 독도 및 센카쿠 제도 자료를 상설 전시

자료: 집필진 조사 및 작성

■ 영토·주권 전시관은 '독도 분쟁화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이 국내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개설

- 2016년 9월 25일 일본 정부는 2017년 내에 도쿄에서 독도 및 북방영토, 센카쿠 제도/다오위 다오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홍보하기 위해 해도 등 관련 자료를 상설전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 당시만 해도 해상보안청 청사에서 일부 자료를 상설전시하고 있으나, 평일관람만 가능하며, 매달 100명 정도가 관람하는 수준이었음
- 2017년 11월,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2018년 3월까지 도쿄 치요다구 히비야공원 내 시정회관에 독도와 센카쿠 제도 관련 자료를 소개하는 전시관을 개관할 것이라고 보도함

- 2018년 1월 25일 내각관방 영토실은 전시관 개관이 ‘독도 문제 및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정세에 관해서 국민 여론을 계발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발신하는 일환’ 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함
- 개관식에서 에자키 대신은 “영토 정세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내외발신의 강화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일본의 대중 기반 홍보 방식과 차별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전문가 대상 홍보 방식 개발해야

■ 일본의 홍보 전략은 대내외적으로 독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독도의 분쟁화 전략’의 하나

- 일본의 기본적인 홍보 타겟은 국내외 대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독도에 대한 전 세계 이목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자국민을 대상으로 일본이 피해자라는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이러한 전략은 대외적으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사실을 널리 홍보하여 현재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 행사를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내부적으로 일본이 홍보를 강화하면 할수록 자국의 영토를 타국이 불법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피해자 심리를 강화시켜, 평화헌법 개헌 및 재무장과 관련한 이슈에서 보수우파 성향의 아베 정권에 유리한 정치 지형을 창출시킴

■ 이러한 일본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홍보는 대중 홍보에서 전문가 대상 홍보로 그 타겟을 전환할 필요

-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분쟁의 수위를 가중시키는 역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일본의 ‘독도 분쟁화 전략’에 일조하는 부작용이 있음
-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는 독도에 관한 홍보의 타겟을 제3세계 중립적 학자 및 전문가 집단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 특히 독도 관련 주요 사료에 대한 엄정한 해석 및 객관적 평가를 전 세계 여론 주도층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함

전문가 대상 홍보의 시발점은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에서부터 시작해야

■ 전문가 대상 홍보의 가장 큰 장애물은 언어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 선행 필요

- 일본이 언급을 회피하고 있지만 우리의 입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주요 사료는 일본이 독도가 자신의 땅이 아니라고 언급한 고문서들로서 이러한 자료들은 모두 한자로 작성되어 있음
-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년),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1696년), 「조선국 교제 시말 내 탐서」(1870년), 「태정관 지령 문서」(1877년)등 일본이 독도가 자신의 영토가 아니라는 점을 부인한 사료는 한자(漢字)를 기본 문자로 하여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문헌이기 때문에 한자문화권에서도 이 분야 전문가들만이 읽을 수 있는 자료임
- 자료 접근의 한계 때문에 일본이 자신들의 주장에 맞추어 사료의 해석을 임의로 변경시키거나 왜곡시켜도 그 문제점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영문화 작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영문 번역 작업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아울러 마련해야 함
- 영문화 작업에 제3세계 학자 및 전문가, 동아시아 중세 및 근대사를 전공하는 외국 학자들을 참여시켜 그 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한 당시 일본 국가최고기관 문서인 「태정관 지령 문서」(1877년) 등에 대한 영문 번역 및 출판 필요

- 가장 중요한 자료는 1877년 작성된 「태정관 지령 문서」이며, 이러한 중요 사료는 이러한 문서가 나오게 된 경위와 관련 부속문서 일체를 묶어서 영문으로 번역 출간할 필요가 있음
- 중립적 3학자들과 서구권 국가들의 동아시아 역사 전문가들을 번역 작업에 참여시켜 작업 자체의 중립성을 확보한 뒤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영문 출판물을 발간하면서 출판기념회 및 도서 전시회를 통하여 전 세계 언론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타깃형 홍보 정책 적극 추진해야

- 중요 사료의 영문 번역 자료를 번역 및 해제한 전문 학술서적을 출간하면서 성과 확산의 방식으로 출판기념회, 도서전시회 등을 뉴욕, 런던 등 주요 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필요함
- 어느 정도 전문가 대상 홍보 성과가 확산되면 해당 자료의 프랑스어 번역, 독어 번역, 스페인 번역 작업 등도 함께 병행하여 대중 확산 방식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함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행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TEU 이상 줄어든 듯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업·수산물,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 자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방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간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자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알리바바,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구분	제목	발행일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침범!·로봇·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생이모자반,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가미 확산 우려,방역체계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적,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 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직불제 제도 개선 방향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2017.11.15

구분	제목	발행일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북극 과학연구 강화를 위해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5
제60호	제19차 당 대회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 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제66호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2018.01.10
제67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2018.01.17
제68호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 - 범부처 R&D 추진 필요 -	2018.01.24
제69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8.01.31.
제70호	해상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추진 필요	2018.02.07.
URL : http://www.kmi.re.kr/		